## 한국 화학산업 미래는 있는가? …XXIII

# “정부 혁신이 더 시급하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노라면 참으로 모순된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03년 중앙정부 부처의 예산요구액이그렇고, 기금운용이그러하며, 공기업의경영혁신이니인력감축이니하는것들이그렇다.

중앙정부 부처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이 무려 132조6000억원으로 2002년 예산 105조9000억원보다 25.2% 늘었다고 한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포함한 재정규모 기준 요구액은 140조5000억원으로 2002년예산에비해 25.5%(28조5000억원) 증가한것이다.

중앙정부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재정규모 기준으로 2000년 24.0%에서 2001년 29.9%로 높아진 후 2002년 28.0%, 2003년25.5%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기획예산처는균형재정을달성하기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가을 최종 편성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003년 경상성장률 7-9%를 감안해 120조원을넘지않는수준에서편성할방침이어서대폭삭감될것이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삭감을고려해부풀려요구하는것이관례라는점은누구나다인식하고있다.

48개기금의 2003년도운용액도 163조3000억원을요구했다고한다. 2002년146조8000억원에비해11.3% 증가한 것으로국민연금기금등4개연금성기금의운용규모증가액 17조7000억원이전체증가분의대부분을차지했다. 경제·복지·사회등 40개사업성기금은 2002년에비해10.0% 증가한 51조원을,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과 국민주택기금등경제·산업·과학분야는 13.1% 증가한37조9000억원을, 4개계정성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금의 차입원금상환 감소에따라9.8% 감소한53조9000억원을요구했다고한다.

특히, 48개 기금은 자체수입을 통해 16.9% 증가한 60조3000억원을 조달하고 예산출연·융자 등 정부 내부수입을 통해 43조8000억원을 마련하는데, 예산출연이 2조9000억원늘어난 5조9000억원에달했다. 채권발행 등민간차입을 통한수입이22.1% 줄었다고는하나차입도 34조원에달하고있다.

지출에서도 기금운영비가 1조3000억원으로 32.7% 증가하고, 차입금원리금 상환이 18.1% 감소했다고는 하나 26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설비투자자금 지원확대에 1조원을 증액하고 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1조2000억원, 고용보험급여 증가에 1800억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에 900억원을늘렸다고 하니 불요불급성 경비에국민세금을쏟아붙는꼴이다.

한편에서는 2002년들어공기업과정부산하기관9곳에서직원 421명이 감축된 것으로집계됐다고자랑이다. 1-4월 자산관리공사가 기금업무 등 업무량 축소에 따라 직원 300명을 줄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도 조직개편으로 각각 28명과 23명을, 대한광업진흥공사는조직개편으로 18명, 신용보증기금은 상위직급 위주의 명예퇴직으로 17명을 감축했고 무역협회와 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각각 10명씩 줄였다고 한다. 또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산업은행등 14개기관은불필요한자산 30건을매각해 760억원의수익을올렸다는것이다.

중앙정부와 기금은 국민세금을 펑펑쓰고, 공기업들에게는 경영혁신을강요하니정책의 말발이 먹혀들리 없고, 반발이 확대되는것도 당연하다고해야 할정도이다. 일반회계예산요구증가율만보아도그렇다. 중앙인사위원회가399% 증액을요구한것을비롯해여성부154%, 환경부151%, 식품의약품안전청133%로나타나고있다.

없애거나통폐합대상인부처들이엄청난예산을요구하는것이문제인것이다. 국민과경제계는4년전DJP 정부출범당시에정부부처를통폐합해대폭줄이고간섭을하지않는것이도와주는것이라고누누이강조했건만모두가허사였다. 쓸데없는 부처가 생기고 감축된 인력이 되살아나 오히려 간섭이 증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많아지고있는것이다.

18개 중앙부처에 19개 처·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등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도 중앙부처가 무려 40개를넘고있다. 재정경제부의경제업무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응용기술업무를통합해경제산업부로, 환경부와 산자부의 에너지업무를 통합해 환경자원부로, 교육인적자원부와과기부의 기초과학업무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보건복지부의 의약 · 식품 관련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관하고 노동부, 여성부를 통합해 사회복지부로개편해야한다는것은선택권이없는명제이다.**

DJ가실패한원인이아들들의비리에앞서국가장래보다는DJ 개인의명예를더중요시했다는점과청와대안방마님의국정농단이심각했다는점이라고볼때DJ정권의잘못을바로잡는일은시급한현안이다.

**<화학저널2002/6/24>**